

한미동맹에 있어서 미국의 안보 공약 이행 정도에 대한 분석

박휘락
(국민대학교)

- 목 차 -

- I. 서론
- II. 강대국의 안보 공약 이행 시 고려요소 검토
- III. 한미동맹과 동맹공약 관련 사례
- IV. 미국의 동맹공약 이행 정도 평가
- V. 결론

I. 서론

미국에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경제 및 이민의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지만, 대외문제에 대해서는 고립주의(isolationism)의 경향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주기성을 띄고 있다고 할 정도로 생소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위협 하에서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즉 미국의 대규모 핵 보복 위협에 근거하여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해오고 있는 한국에 계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하여 동맹공약의 이행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인식될 경우 북한의 오판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국제적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다수 국가들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어서 동맹공약이 가볍게 인식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전쟁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동맹공약 의지가 조금이라도 약화될 조짐이 있다면 미리 파악하여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1974년의 베트남처럼 실제 상황이 발생한 상태에서 미국이 지원하지 않아서 원망을 해봐야 소용없기 때문이다. 절대적으로 타당한 판단의 근거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미국이 동맹공약 이행 여부를 결정할 때 어떤 요소를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이에 근거하여 유사시 미국의 이행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보는 것이 필요해지는 이유이다.

한국의 안보에 있어서 한미동맹보다 더욱 중요한 요소는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는 한국 국제정치 학자들의 보편적인 주제였다. 다만, 한국의 국력신장으로 타국에 의존하는 안보에 대한 불만이 증가되면서 한미동맹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는 연루(entrapment)와 방기(abandonment)의 모델에 근거하여 미국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었다(손한별 2013, 117-147; 박종진 2010, 1-32; 최중우 2010, 241-261; 이정철 2009, 147-168; 김준형 2009, 101-125; 서정경 2008, 95-118). 비록 소수이지만 ‘자율성-안보 교환’(autonomy-security trade-off)의 모델에 입각하여 한국의 자주성 강화가 수반하는 위험성도 제시되었다(박원곤 2004, 79-99; 박원곤 2014: 장노순 1996, 85-99). 그러나 이들 연구 모두는 한국의 입장에 입각한 것이었고,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을 바라보려는 시도는 드물었다. 그러나 동맹의 이행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미국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시각에서 한반도 유사시 개입 여부와 정도를 평가해보는 노력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미국이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가치와 유사시 동맹공약의 이행 필요성을 판단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동맹의 유지와 중단에 관한 이론을 원용하여 동맹공약의 이행의지 평가를 위한 요소를 도출해내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몇 가지 중요한 사례에 그 요소를 적용하여 한미동맹의 실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위 평가요소를 사용하여 현재의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공약 이행 의지가 어느

정도일가를 평가한 후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강대국의 안보 공약 이행 시 고려요소 검토

동맹은 다른 국가의 힘을 빌려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세력균형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서(Morgenthau 1993, 197-202), 국가안보의 고전적 방법 중 하나이다. 개인이 친구와 협력하여 영향력이나 힘을 효율적으로 증대시키는 것과 기본 원리는 유사하다. 당연히 동맹은 서로의 군사력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때는 지속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종료되거나 약화된다.

1928년의 파리조약이나 1945년의 유엔헌장에서 전쟁을 불법화한 이후로 동맹의 목적은 다소 변화하고 있다. 전쟁의 수행보다는 역제로 중점이 전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 이외의 분야로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하는 발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전쟁의 직전과 직후에 동맹이 체결 및 파기되었던 역사적 전통과 달리 현대에는 평시에도 동맹이 유지 및 작동된다. 월트(Stephen M. Walt)가 동맹의 종료와 유지를 분석하면서 “동맹의 침식(erode)과 와해(dissolve)”를 함께 언급하고 있듯이(1997, 158) 현대에는 동맹을 새롭게 체결하지도 않지만 기존 동맹을 쉽게 파기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하면, 현대의 동맹은 생멸(生滅)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되거나 약화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대표적인 학자는 월트이다. 그는 냉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심의 다수 동맹이 유지되는 현상에 주목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합리적인 요소와 비합리적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였는데, 위협인식의 변화(changing perception of threat), 신뢰성의 저하(declining credibility), 그리고 국내정치(domestic politics), 이 세 가지를 동맹 종료 또는 약화의 핵심적 요인으로 인식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현대 동맹에 대한 교훈을 찾은 바 있었다(1997, 158-164). 월트가 제시한 세 가지 요소별 세부내용과 해당되는 역사적 사례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동맹 종료 및 약화의 요인

영향 요소	세부 항목	사례
위협인식의 변화	세력균형의 변화	- 1887년 결성된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이탈리아 간 삼국 동맹이 1902-1907년간 약화된 사례
	적의 의도(적대상)에 대한 재평가	- 1866년 프러시아와 이태리 동맹의 결성과 종료 - 1913년 대터키전 승리후 발칸연맹(불가리아, 세르비아, 그리스) 종료 - 1939년 체결된 소련과 독일 간 폴란드 분할 협정의 2년 후 종료
	동맹국의 방어력 증대	- 미국의 핵무기 개발 후 제기된 나토의 약화에 대한 우려
신뢰성 저하	동맹의 방어력이 미흡	- 1793년 결성된 스페인, 프러시아 등의 반 나폴레옹 동맹이 연속적 패배 후 와해 - 1940년 폴란드는 독일과 동맹을 맺었으나 히틀러가 패배할 것 같자 소련과의 동맹으로 전환 - 소련이 약해지자 1970년대에 이집트는 소련과의 동맹을 폐기하고 미국과의 동맹으로 전환
	동맹국의 지원의도에 대한 의심	- 냉전 후 미국의 지원 여부에 대한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의 의심
국내정치	인구, 문화, 역사적 일체성이 약해질 경우 동맹약화 가능	- 인종, 문화, 역사적 일체성이 약해질 경우 동맹약화 가능
	동맹공격을 통한 국내 정치적 입지 강화	- 1967년 프랑스 드골대통령의 나토 군사기구 탈퇴 - 1985년과 86년 사이 뉴질랜드 좌파정치인들의 미 참수함 기항 거부로 미-뉴 동맹 와해 - 필리핀 정치인들의 지속적 요구로 1992년 미군 철수
	체제변화	- 혁명 후 프랑스의 대 오스트리아 동맹 파기, 혁명 후 러시아의 대 영국·프랑스 연합 탈퇴, 공산화된 중국의 미국관계 중단 - 쿠바(1959), 이란(1979), 니카라과(1979)
	이념적 상이성	-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맹과 이슬람국가 간의 동맹이 강력하지 못했던 이유

출처: Walt 1997, 158-164에서 설명한 내용을 도표화.

〈표 1〉에 제시된 내용은 동맹공약의 이행 여부에도 원용될 수 있다. 동맹공약의 이행을 망설이는 것이 바로 동맹공약의 약화이기 때문이다. 즉 동맹국 간 위협의 공통성이나 신뢰가 약화되거나, 국내여론이 동맹에 부정적일 때 동맹은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동맹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월트는 '신뢰성'을 상대 동맹국의 군사력과 지원 의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비대칭동맹(asymmetric alliance)과 관련해서는 다소 변화될 필요가 있다. 비대칭동맹에서는 동맹 군사력의 합계에서 약소국의 군사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대신에

강대국의 군사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강대국 입장에서 신뢰성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감당능력'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감당능력을 강대국의 군사력으로만 보서는 지나치게 단순하고, 다수의 약소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강대국이 해당 동맹공약을 이행하더라도 다른 동맹국에 대한 지원태세나 자신의 전반적인 안보태세를 위태롭게 만들지 않는 수준으로 봐야 한다. 즉 월트의 기준을 적용하여 강대국의 동맹공약 이행태세를 평가하고자 한다면 신뢰성을 감당능력으로 전환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세 가지 요소는 일반적인 기준일 뿐,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강대국의 동맹공약 이행 여부는 그 당시의 국익 판단 결과에 더욱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이 해당 동맹국의 사태에 개입함으로써 감수해야 하는 위험과 기대되는 이익을 비교해본 후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동맹국에 대한 공약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과 이익도 강대국의 동맹공약 이행 여부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동맹공약 이행에 따른 위험에서 가장 현저한 것은 '연루'로서, 이것은 전혀 공유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동맹국의 분쟁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게 되는 위험을 말한다(Snyder 1984, 467). 연루가 되면 동맹국이 지고 있는 부담을 공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확산(escalation)될 경우에는 더욱 큰 위험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강대국의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동맹국의 적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강대국과의 전쟁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연루의 위험은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동맹공약 준수에 따른 이익 증에서 동맹국의 군사력을 결합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강대국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약소국의 소규모 군사력도 유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이익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핵전력의 경우에는 더욱 비핵국가의 재래식 군사력이 크게 의미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동맹국으로부터 강대국이 기대하는 이익은 해당 약소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그러한 영향력을 통하여 지역 및 세계적인 세력균형에서 유리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

율성-안보 교환 모델(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서, 통상적으로 강대국은 안보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약소국의 정책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이익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Morrow 1991, 920-930).

이렇게 볼 때 강대국의 입장에서 동맹공약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동맹국과 공유하고 있는 위협이 커야하고, 감당능력이 충분해야 하며, 국내정치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당시의 상황에서 판단되는 동맹공약 이행을 통한 이익이 위협보다 더욱 커야 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①공통위협, ②미국의 감당능력, ③국내여론, 그리고 ④연루의 위협과 ⑤동맹지속에 따른 이익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로 미국의 안보 공약 이행 정도를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요소들이 과연 최선의 기준이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란이 가능하고, 이것은 후속 연구에 의하여 더욱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Ⅲ. 한미동맹과 동맹공약 관련 사례

1. 한미동맹의 개관

한미동맹은 전형적인 비대칭동맹으로서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고, 한국이 자율성을 양보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구도 하에서 한미 양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고, 제2조에서 “서로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을 경우에 서로 협의”하도록 약속하였으며, 한국은 제4조를 통하여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보장하고 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405-409). 이를 위하여 한미 양국은 안보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협의하고 있고, 특히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와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라는 명칭으로 양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매년 1회씩 정례적으로 만나서 국방 및 군사문제를 협의해 오고 있다(한미 양국 간 SCM과 MCM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114-116; 119-122).

한미동맹 공약 이행의 결정적 증표는 주한미군(USFK: United States Forces Korea)이다. 주한미군의 규모는 6.25전쟁 직후에 8개 사단, 32만 5천명에 달하였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축되었음에도 미 8군 소속의 육군 19,200명, 미 7공군 예하 공군 8,800명, 미 해군 250명, 미 해병대 250명으로 총 28,500명에 달한다(IISS 2014, 260). 이들은 주둔 자체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공격할 경우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평택과 대구로 이들의 주둔지역을 통합 및 이전해 가고 있지만, 서울에 한미연합사령부(CFC: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를, 동두천 지역에는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잔류시키기로 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인계철선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제46차 SCM 공동성명 2014). 그리고 한국은 이들의 주둔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약 1조원 정도의 방위비분담금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공약 이행 의지는 한미 양국군으로 한미연합사령부를 구성하고, 그 사령관을 미군이 담당함으로써 더욱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군 4성 장군에게 유사시 한미 양국군을 통제하여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유사시 전쟁승리를 보장하도록 지시된 상태이고, 그는 이를 위한 평시의 작전계획 수립, 위기관리 등도 책임지게 되어 있다. 나아가 한미연합사령관은 매년 한국군 및 다수의 증원 미군을 대상으로 ‘키 리졸브’(Key Resolve), ‘독수리’(Fool Eagle), ‘울지 프리덤가디언’(Ulchi Freedom Guardian) 연습들을 실시함으로써 한미 양국의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국방부 2014, 256).

그 동안 한미동맹 관계 속에서 북한의 도발이 적지 않았고, 동맹의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지만, 위와 같은 한미동맹의 기본 틀은 그다지 변화하지 않았다. 미국은 그들의 동맹공약을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왔고, 지금도 그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최근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한미동맹은 새로운 도전에 처하게 되었고, 미국의 동맹공약 이행 의지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과거에 미국이 동맹공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사례와 다소 소극적이었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핵전쟁과 관련한 한 미국의 동맹공약 이행 정도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2. 동맹공약의 효과적 이행 사례

한미동맹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동맹이라고 할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다. 소규모 도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면전이나 이와 유사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한미동맹이 견고하고, 그것이 전쟁을 제대로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동맹의 원활한 가동을 위하여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

그 동안 한미동맹의 견고성을 과시한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각 사례 별로 독특성도 적지 않고, 동맹공약 이행과의 연관성에도 차이가 있다. 또한 개별 사례에 대한 대응의 여부와 강도를 대규모 전쟁 시의 그것으로 직접 연관시킬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례는 한미동맹의 견고성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들을 중심으로 동맹공약 이행에 관한 요소를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그 동안 발생한 북한의 도발 중에서 미국이 가장 적극적인 공약이행의 자세를 보인 것은 1976년에 발생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국가의 위기관리체제를 최고조로 가동하였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였다.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은 사소한 발단에서 시작되었다. 1976년 8월 18일 10시 30분경 유엔군 측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3관측소와 5관측소 사이에 있는 미루나무가 너무 자라서 시계(視界)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그 나무를 '잘라 내기로'(나중에는 가지치기로 변경) 결정하였고, 이를 시행하려고 하자 북한군이 이를 저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건이다. 이로 인하여 미국의 보니파스(Bonifas) 대위와 바렛트(Barett) 중위가 북한군이 휘두른 도끼에 사망하였고, 다수가 부상당

했다. 이것을 북한군의 고의적 도발로 인식한 한미 양국은 8월 21일 ‘Paul Bunyan’이라는 이름의 작전으로 병력을 투입하여 나무를 절단하였다. 이러한 미군의 단호한 태도에 놀란 당시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은 그날 오후 조선인민군총사령관의 이름으로 휴전협정 이래 최초로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고, 며칠간 논의를 한 후에 미군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사건의 전체 협상과정은 이문항 2001).

비록 발단은 사소하였지만, 미군 장교 2명이 살해당했다는 점으로 인하여 미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Henry A. Kissinger) 주재 하에 ‘워싱턴 특별대책단’(WSAG)을 구성하여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미국은 일단 F-4 팬텀기 1개 대대를 오키나와로부터 한국으로 이동 배치하고, 미국에 있는 F-111 전폭기 1개 대대를 비행 준비시켰으며, 괌의 B-52 폭격기를 한국으로 배치시켰다(박계호 2013, 67-68). 또한 항공모함 미드웨이호를 한반도 해역으로 전진시키고, 8월 19일 10:30분에 한미 양국군의 방어준비태세(데프콘, Defcon: Defense Condition, V가 평시이고 I이 전쟁직전)를 IV에서 III으로 격상시켰으며, 8월 21일에는 한미 1군단에 한하여 데프콘-II로 격상시켰다. 이러한 조치 후에 미 공병대와 특전부대 병력이 투입되어 1976년 8월 21일 문제가 된 미루나무를 절단하였던 것이다(박계호 2013, 69).

이 사건에서는 미군이 직접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미국이 대대적인 조치를 강구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그러한 조치들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동맹공약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각오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미국은 군사력을 상당할 정도로 증강하였고, 부분적이지만 전쟁직전 상태인 데프콘-II까지 발령함으로써 동맹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자세를 과시하였다(허완 2014, 63).

2)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도 미국의 동맹공약 이행 의지를 입증한

중요한 사례이다. 1970년대 중반부터 유엔총회에서 공산측이 유엔사의 해체를 요구함에 따라 위기의식을 갖고 있던 차에 1977년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한국은 더욱 불안해졌고, 급기야 그 보완책으로 한국군과 미국군을 중심으로 하는 전투사령부의 설치를 요구하게 되었다. 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를 참고하여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관계와 구조를 미측과 협의하였고, 그 결과 1978년 11월 7일 현재의 한미연합사를 창설하게 되었다(류병현 2007, 77~78). 이후부터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유사시 전쟁승리라는 유엔군사령부의 핵심적인 임무는 한미연합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관리 업무만 전담하게 되었다.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게 되었고, 이 체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미연합사 창설은 6.25전쟁의 부산물로 존재하던 유엔군사령부 중심의 체제를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로 전환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 사령부 창설 후 양국군 간의 다양한 협조 및 협력체제가 구축되었듯이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양국군의 군사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였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구체화하는 수단이었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에서 한미연합사령관(양국 합참의장에 의하여 지시받도록 되어 있는)으로 전환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한미 양국의 수평적 관계가 정립되었고, 공동의 사령부를 통하여 한반도 전쟁억제와 유사시 승리를 위한 기획 및 계획, 그리고 참모협조를 시작하게 되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168-169). 한미동맹이 약속하고 있는 유사시 안보지원의 이행 약속은 한미연합사령부 창설을 통하여 더욱 강화 및 보장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북한의 핵실험

최근에 미국의 동맹공약 이행 의지가 과시된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었다. 실험 자체가 남한과 미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핵무장할 경우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도발보다도 심각하였고, 따라서 동맹 차원에서 대응해야 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그들 군사력의 과시를 통하여

확고한 동맹공약 이행 의지를 천명하였다.

예를 들면,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2003년부터 북한의 의심스러운 선박을 조사하기로 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의 조치를 더욱 강화하였고,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통하여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실험을 불법화하였다. 북한에 대하여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한국의 노무현 정부와 충돌을 빚을 정도로 미국의 대북 조치는 적극적이었다. 그러다가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한미 양국은 6월에 정상회담을 실시하면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발표하였고, 한국의 노무현 정부 때 다소 소원했던 한미동맹 관계를 일거에 복원하였으며, ‘확장 억제’에 의한 미국의 응징보복 개념을 확실하게 천명하였다.

북한의 핵실험 강도가 높아질수록 미국의 동맹공약 이행 조치는 더욱 강화되었다.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 다음 달 미국은 전략폭격기 B-52, 스텔스 폭격기 B-2, 공군 최강 전투기 F-22 등을 한반도에 투입하고, 본토에서 1만 500km를 15시간 이상 비행하여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 2대가 훈련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등으로 확고한 동맹공약 이행 태세를 과시하였다(유용원 2013, A4). 2016년 1월 6일의 제4차 핵실험 이후에도 미국은 B-52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출동시켰다(유용원·전현석 2016, A4). 이러한 조치들이 북한에게 어느 정도의 억제효과를 야기했을 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동맹공약 이행 의지가 확고함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은 분명하다.

3. 안보 공약 이행 미흡 사례

미국이 약한 공약의지를 보인 사례들도 다양하여 동일한 비중이나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특정한 위기 시 미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당시 행정부의 판단력에 따른 것으로 일시적이지만, 주한미군의 감축과 같은 사안은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 변화를 의미할 정도로 영향력이 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다수의 사건을 통하여 공통적인 교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미군이 소극적으로 대응

한 몇가지 사례를 평가해보자 한다.

1) 청와대 습격 사건과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후 가장 노골적인 북한의 도발은 1968년 초에 발생하였다. 1월 21일 밤 북한군 특수부대원 31명이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하여 청와대로 침투를 기도하였고, 이들에 대한 소탕작전이 진행되는 기간인 1월 23일에 83명이 탑승한 미 해군의 정보수집 군함인 푸에블로호(USS Pueblo, AGER-2)가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다.

북한군에 의한 청와대 습격 시도는 국가원수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서 한국에게는 너무나 심각한 도발이었다. 그래서 한국은 1월 22일 '대간첩 대책본부'를 발족하였고, 1월 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장관들과 소탕작전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미국에게 북한에 대한 군사보복 시행을 제안하면서 한국군 현대화를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다(박계호 2013, 58-59).

반대로 미국에게는 청와대 습격보다 푸에블로호의 납치가 더욱 심각하였다. 1월 24일 하루 동안 대통령이 주재한 2차례 안전보장회의를 포함하여 4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동해안으로 출발시켰으며, 2개의 항모전단을 추가로 파견하였다. 일본으로부터 F-4팬텀기 대대를 한반도로 이동시켰고, 예비군도 14,787명 소집하였다(박계호 2013, 62). 존슨 대통령은 1월 25일 국민들에게 이 사건을 직접 설명하였고, 국무장관은 북한의 나포는 '전쟁행위'(Act of War)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를 회부하였으며, 동시에 승무원의 안전한 송환을 위한 비밀협상도 시작하였다(박계호 2013, 61).

자국 군함의 납치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한국 대통령 살해 목적의 청와대 습격에 대해서는 유엔군사령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나아가 한국을 제외한 채 북한과 미국이 비밀협상을 벌이자 미국에 대한 한국의 불만은 커졌다(홍석률 2003, 62-63). 1968년 12월 23일 미북 간 비밀협상이 타결되어 선원들이 귀환하게 되었지만, 한국 정부는 이후부터 미국의 동맹공약 이행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은 1968년 2월 26일 서울대 졸업식과 27일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미국이 대신 지켜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스스

로가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4월 1일부로 250만 명에 달하는 향토예비군을 창설하게 되었다(박계호 2013, 59).

2) 닉슨과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결정

베트남 전쟁에서 상황이 악화되자 1969년 7월 25일 닉슨 대통령은 괌(Guam)에서 동맹국 방위의 일차적 책임은 동맹국이 져야 한다는 소위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이의 후속조치로 1970년 7월 5일 포터(William Porter) 주한 미 대사는 정일권 국무총리에게 주한미군의 감축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였고, 한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971년 3월 동두천에 주둔해온 미 제7 보병사단 2만 명과 3개 공군 비행대대를 철수시켰다. 그 결과 1960년대 후반에 62,000명 규모였던 주한미군 병력은 41,000명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서부전선에서 휴전선을 담당하던 미 제2 보병사단이 동두천과 의정부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모든 휴전선을 한국군이 담당하게 되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124-125).

닉슨 행정부에서 추가적인 주한미군의 감축은 없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카터(Jimmy Carter)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반도의 핵무기와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고 약속하였고, 1977년 1월 취임 후 33,000명을 4-5년 내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하였으며, 3월 8일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외무장관에게 이를 통보했다. 1977년 7월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미국은 1978년까지 6,000명을 감축한 후 나머지는 4-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반대와 당시 미 8군 참모장이었던 싱글러브 소장을 비롯한 미군 지도층의 저항으로 카터 대통령은 1979년 7월 20일 결국 철군 정책을 중단하였고, 1978년 3,400명을 감축하는 데 그쳤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126-128).

닉슨과 카터 대통령의 철수는 부분적으로만 구현되었지만, 그 영향은 적지 않았다.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이 한국 국민들과 정부의 머리를 맴돌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맹공약 준수 여부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회의가 증대되었고, 자주국방 노력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3) 미 의회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

1981년 취임한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이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백지화하였으나, 1989년 부시(George Bush) 행정부 시절에는 미 의회에서 주관하는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다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민주당의 넌(Sam Nunn) 의원과 공화당의 워너(John W. Warner)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은 미국 정부로 하여금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1992년 1단계(1990-1992)로 7,000명을 감축하고, 2단계(1993-1995)로 6,500명을 감축하며, 3단계(1996년 이후)에는 최소규모만 주둔한다는 내용으로 확정하였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186-188). 이에 대하여 한국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으나 미국은 결국 1992년 말까지 1단계에 해당되는 7,000명을 철수시켰다. 다만, 1990년대 초부터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제2단계 감축은 유보되었고,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을 탈퇴함으로써 위기가 고조되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10만 명 수준의 주둔으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주한미군의 감축이 중단되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188-189).

주한미군은 미 동맹공약 이행의 가장 결정적인 수단과 징표라는 점에서 이의 주둔 여부와 그 규모는 한미동맹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 의회가 감축을 주도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동맹의 유지에 관하여 미 국내여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증대되었다는 의미로서, 미국의 국내여론이 부정적일 경우 미국의 안보 공약도 이행되지 않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4. 동맹공약 이행 요소에 따른 사례 분석

한미동맹은 비대칭 동맹의 전형으로서 미국이 안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다른 어느 동맹보다 체계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조약은 물론이고, 상당수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며,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하여 한미 양국군의 일사불란한 지휘통제를 보장하고 있고, 양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매년

1회씩 만나서 군사협안을 협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부 불안했던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미국의 동맹공약 이행 의지는 확고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시 한미 양국은 부분적이지만 테프콘-II까지 발령하여 전쟁을 각오한다는 자세를 견지하였고, 유엔군사령부 체제가 흔들리자 1978년에는 양국 간 쌍무적 군사지휘체제인 한미연합사를 창설하였으며,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미국은 대규모의 응징보복 전력을 파견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견고성을 과시하곤 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사례를 제2장에서 살핀 ①공통위협, ② 감당능력, ③국내여론 ④연루의 위협 정도 ⑤동맹지속에 따른 이익의 5가지 요소를 적용하여 평가해보면 <표 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 2> 동맹공약 이행 요소에 의한 분석 1

사태의 종류	요소별 평가				
	공통위협	감당능력	국내여론	연루위협(최소)	동맹이익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	○	△	○	○
한미연합사 창설	○	○	△	○	○
북한 핵실험	△	○	△	△	○

즉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의 경우 ①공통위협 ④연루의 위협 ⑤동맹지속에 따른 이익은 냉전 기간이라서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상황이었고, ② 감당능력의 경우에도 미국이 베트남에서 평화협정을 맺은 지 3년이 지나서 다소 문제가 없었다. 다만, ③국내여론의 경우 베트남 전쟁의 후유증으로 1976년에는 43%의 미국인들이 대외문제에 대한 불개입을 요구할 정도로 커진 상태였으나 1980년에는 30%대로 하락한 것으로 보아 그 방향이 전환되는 시기였다(Pew Research Center 2013). 한미연합사 창설의 경우에는 앞의 판문점 도끼만행 후 2년만 경과된 시점이어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최근 핵실험의 경우 미국의 대외문제 개입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은 미국의 9/11 직후 30%였던 것이 2013년에는 52%로 증대될 정도로 강화된 상태였다(Pew Research Center 2013).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적 외교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한미 양국 간 위협의 공통성이 줄어들고 있고, 무엇보다 핵전쟁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연루의 위협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대규모 군사력 시위를 통하여 확고한 동맹공약 이행 의지를 과시하기는 하지만, 핵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확장억제의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동맹공약 이행 의지가 확고하지 못했던 사례 중에서 한국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1968년 1월에 이들 간격으로 발생한 청와대 습격 사건과 미 해군 푸에블로함 납치에 대한 미국의 차별된 접근이었다. 미국은 청와대 습격사건은 거의 무시하면서 푸에블로호 납치에 대해서는 국가 안전보장회의 개최와 테프콘-II로의 격상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1970년대에 닉슨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의 일방적 철군과 감축, 1990년대에 미 의회가 법까지 만들어서 추진한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이 공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한국이 갖기에 충분하였다. 제2장에서 살핀 ①공통위협, ② 감당능력, ③국내여론 ④연루의 위협 정도 ⑤동맹지속에 따른 이익의 5가지를 적용하여 이들을 평가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동맹공약 이행 요소에 의한 분석 2

사태의 종류	요소별 평가				
	공통위협	감당능력	국내여론	연루위협(최소)	동맹이익
청와대 습격사건	○	×	○	○	○
닉슨과 카터의 주한미군철수	○	×	×	○	○
미 의회 주한미군 철수 요청	○	×	×	○	○

<표 3>을 설명하면, 청와대 습격사건이 발생한 1968년은 냉전이 절정에 다다르던 시기라서 다른 요소는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당시 미국은 베트남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고, 푸에블로호 사건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감당능력’에서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다. 1970년대에 진행된 닉슨 행정부와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의 경우에는 베트남 전쟁

이 진행되거나 종료되는 시기라서 ‘감당능력’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국내여론’이 너무 부정적이었다. 미국의 대외개입에 관한 부정적인 여론이 1964년에는 20%에 불과하였으나 1976년에는 43%까지 악화되었다(Pew Research Center 2013). 1990년대 의회가 주도한 감축 요청의 경우에 1991년 걸프전쟁을 치루면서 ‘감당능력’에 다소의 부담이 발생하였고, 대외개입에 대한 ‘국내여론’의 경우에도 1990년 즈음 부정적 여론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1995년에는 41%까지 이르렀다(Pew Research Center 2013).

현재까지의 사례만으로 전면전과 같은 결정적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미국이 동맹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한미동맹 상에서 발생한 사건은 전쟁과 같은 규모로 금방 확산될 성격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의 경우 방어준비태세-II까지 하달된 바가 있지만, 이것은 두 미군 장교가 사망한 데 대한 감정적 고려에 의하여 강하게 대응한 것이지 전쟁까지 불사할만한 소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은 지금까지 해공군력을 통한 무력시위에는 적극적이었지만, 수차례에 걸친 주한미군 철수 시도로 볼 때 군사력의 직접적 관련이나 사용에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봐야 한다.

이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동맹공약 이행 여부에 관련된 미국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북한과는 물론이고 중국과의 핵전쟁까지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확장억제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안보 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평가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한 평가 결과에 따라 한국이 어떠한 안보전략을 구사해야할 것인지를 판단해야할 것이다.

IV. 미국의 동맹공약 이행 정도 평가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공약 이행 강도는 어느 수준일까? 제 2장에서 제시한 공통위협, 감당능력, 국내여론, 연루의 위협 정도, 동맹지속에 따른 이익이라는 5가지 요소를 적용하여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통위협

냉전시대 한미동맹의 공통 위협은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 전체였고, 북한은 그 진영의 일원이었다. 그러나 냉전종식 이후 공산진영이 붕괴됨으로써 북한은 개별적 위협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따라서 미국과 한국은 별도의 계산에 의하여 북한의 위협을 평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에게는 북한이 여전히 치명적인 위협이지만 미국에게는 중국보다 낮은 우선순위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점에서 위협에 관한 인식의 차가 존재한다(김현욱 2012, 258-259).

예를 들면, 미국은 2014년에 발표한 ‘4년 주기 국방검토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신속하면서도 포괄적인 군사력 증강과 그에 대한 투명성 부족을 중요한 위협요소로 식별하고 있다(DoD 2014, 4). 그러나 한국의 『2014 국방백서』에서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추진으로 향후 양국 간 전략적 협력과 경쟁이 동북아 지역 안보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정세를 분석하고 있다(국방부 2014, 13). 일부 한국 국민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제)를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한 무게로 주장되고 있다.

다만, 최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위력을 강화하고 있어서 한미 양국 간 위협의 공통성은 커지고 있다. 북한은 현재 10-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로 2020년에는 최대 100개까지 핵무기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Albright 2015, 19-30). 또한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 한국과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

은 물론 괌까지도 공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미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도록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하는 데 진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에 성공한다면 회항(回航)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미 본토도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통성은 매우 커질 것이다.

2. 감당능력

현재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하게 된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 공약 이행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는 핵전쟁을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는 것인데, 당연히 미국은 북한의 핵공격을 응징할 충분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중국과 핵전쟁을 수행한다고 해도 미국의 감당능력은 충분하다. 러시아와의 협의에 의하여 감축한 후 2018년 유지할 미 전략핵무기의 양은 <표 4>와 같다.

<표 4> 미국의 핵전력

운반수단	2010년 전력		2018년 보유예정 전력	
	발사대 수	탄두 수	발사대 수 (배치 전력)	탄두 수
Minuteman III	450	500	454(400)	400
Trident	336	1,152	280(240)	1,090
B-52	76	300	46(42)	42
B-2	18	200	20(18)	18
총계	880	2,152	800(700)	1,550

출처: Woolf 2015, 8.

북한의 경우 핵무기로 위협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재래식 전면전이나 제한전쟁을 수행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로 인하여 6.25전쟁과 같은 장기전이 될 경우 엄청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감당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미국은 2016년 회계연도에 5,340억 달러의 재정적

자가 예상되고 있고, 2016년 말 미국의 누적된 공공부채는 정부예산의 3배가 넘는 1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16). 이것은 국방비를 압박해 왔는 바, 미국의 2010년 국방예산은 6,910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2015년에는 5,600억 달러와 2016년에는 5,800억 달러로 감소되었다(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Comptroller)/CFO 2016, 2).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동맹공약 이행을 판단함에 있어서 전쟁에 연루될 경우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미군 병력의 감축과 이로 인한 증원 전력의 제한도 미국의 공약이행 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 미 공군이나 해군의 경우에는 이동성이 좋다는 점에서 감축해도 공약이행에 주는 영향이 적을 수 있으나, 미 육군의 감축은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미 육군의 경우 2001년 9/11 이후 570,000명에 이르렀으나 2014년 현재 약 520,000 정도의 규모로 감축되었다. 앞으로 2018년까지 440,000 - 450,000명으로 감축될 예정이고, 추가 감축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 육군의 경우 450,000명은 “현 방어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용 가능한 전력”이고, 420,000명으로 감축된다면 그것은 “방어 전략을 구현할 수 없는 부족한 능력”(insufficient capacity; cannot implement defense strategy)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Shanker and Cooperfer 2014).

3. 국내여론

현재 미국의 국내여론은 동맹공약 이행에 우호적이지 않다. 미국의 퓨 연구소(Pew Research Center)에서 2016년 5월 5일 발표한 바에 의하면 대외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선호하는 미국인은 37%에 불과하고 57%가 불개입(5%는 무응답)을 선호하고 있다(Pew Research Center 2016). 이것은 2013년의 불개입 선호 52%보다도 더욱 높아진 조사결과이고,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30% 수준에 머물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결과이다(Pew Research Center 2013).

이러한 국내여론은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Donald J.

Trump)의 부상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였고, 이것은 외교적으로는 고립주의 즉 대외문제에 대한 불개입 주장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무역협정의 폐해를 강조하고, 대 중국 무역역조에 대한 시정을 약속하고 있으며, 우방국들에게 적절한 방위부담을 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초기에 특이한 후보로 치부되던 트럼프가 미 공화당 후보로 선출된 데는 그의 노선이 국민들의 불개입주의와 일치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조사 결과는 없다. 그러나 위에서 드러난 대외개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당연히 한국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할 경우 미국은 더욱 불개입을 선호할 것이다. 그나마도 최근 한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호감도가 낮아지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18세 이상 2,034명을 대상으로 2015년 5월 15일에서 6월 17일 사이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52%였지만, 한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1%에 불과하였다(EAI 편집부 2015, 3).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였을 때 한국을 방어하기 위하여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야할 것인가에 관한 설문에서 찬성 47%, 반대 49%로 양분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EAI 편집부 2015, 12). 현재 미국인들의 절반 정도가 한국 사태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4. 연루의 위험 정도

동맹관계는 기본적으로 연루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맹관계를 유지하거나 다른 동맹국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동맹국의 사태에 연루되지 않을 수 없다. 비대칭 동맹에서 약소국은 주로 자율성을 양보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연루를 소홀히 할 수 있지만(2001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을 때 한국은 물론이고, 나토국가들도 동맹의무 수행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안보지원을 담당하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은 연루가 동맹 유지의 주된 수단이라서 연루를 포기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이 심대하게 위배될 경우 연루를 자제하거나 최소한의 수준에서 연루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관계의 본질이기도 한다(1974년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침공하였을 때 미국은 연루를 포기하였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북한이 6.25전쟁과 같은 재래식 전쟁을 수행할 경우 미국이 갖는 연루의 부담은 사활적인 정도가 아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버리자 미국이 감당해야 하는 연루의 위험성은 심각해졌다. 북한이 핵무기로 한미연합군이 공격할 수도 있고, 그에 대응하여 핵전쟁을 수행해야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미국 본토가 핵공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은 물론, 이를 소형화·경량화하여 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 공격할 수 있게 되었고, 2020년에는 최대 100개까지 증대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Albright 2015, 19-30).

더구나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과 2016년 2월 7일 인공위성 발사 명분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여 성공하였기 때문에 멀지 않은 장래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을 개발할 것이다. 또한 2016년 4월 23일 시험발사를 실시한 후 “우리식 수중 발사체의 믿음성이 완전히 확증됐다.”라고 주장하였듯이(채병진 외 2016, 8), 북한은 SLBM을 개발하여 괌과 같은 미국 영토나 심지어 미국의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 미국이 한반도 사태에 연루될 경우 북한은 미 본토에 핵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토에 대한 핵무기 공격을 각오하지 않으면서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개입할 수는 없다.

나아가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이나 핵전쟁의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6.25전쟁의 경험에서 보듯이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행동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여 개입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중국의 군사적 능력이나 핵능력이 아직은 미국에 비해서 훨씬 미흡하지만, 중국과의 전쟁은 미국에게도 심각한 부담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수백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다수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일미군이나 일본의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이상의 중국 미사일 전력을 소개하면 <표 5>와 같다.

〈 표 2〉 중국의 주요 미사일 현황(사거리 800km 이상)

별명	급수	탄두/중량(kg)	사거리	상태
DF-16	SRBM		800-1,000	개발중
DF-21/21A/21B/21C/21D(CSS-5)	MRBM	단일/600	2,150	운용중
DF-25	IRBM	단일 또는/ 1,200-1,800	3,200-4,000	미상
DF-31/31A(CSS-9)	ICBM	단일 또는 3개/ 1,050-1750	8,000-11,700	운용중
DF-4(CSS-3)	IRBM	단일/2,200	4,750	운용중
DF-41(CSS-X-10)	ICBM	단일/2,500	12,000-15,000	개발중
DF-5/5A(CSS-4)	ICBM	단일/3900	12000	운용중
DF-5A	ICBM	단일, 4-6 MIRV/3200	13000	운용중
JL-1(CSS-N-3)	SLBM	단일/600	2150	운용중

출처: Marshall, George C. and Claremont Institutes. 2015.

특히 최근 중국과 미국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갈등관계로 발전하고 있고, 여기에는 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연관되어 있어 자칫하면 세계 대전 규모의 전쟁 발발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2016년 7월 12일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PAC)에서는 그 동안 중국이 주장했던 소위 ‘구단선’(九段線)에 의한 영유권과 이에 근거한 인공섬 건설을 불법행위로 규정하였고,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군사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필리핀의 기지를 재사용하기로 했으며, 수시로 자유항행작전(FONOP: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을 실시하여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키고자 노력 하고 있다. 중국 역시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해군력을 증강하면서 미국의 자유항행작전에 대하여 군사적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지역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영유권’과 미국이 요구하는 ‘항행의 자유’는 양국의 핵심이익이라서 양보하기 어렵고, 따라서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남중국해에 있어서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되기도 한다(변창구 2016, 41-42).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남중국해로 비화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이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중국과의 대규모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

5. 동맹지속에 따른 이익

한국과의 동맹을 지속할 경우 미국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 중에서 가장 현저한 것은 동맹의 약속을 지킨다는 신뢰성이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동맹공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나토와 일본을 비롯한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동맹공약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적대세력들도 미국의 개입의 지가 약화된 것으로 해석할 것이기 때문이다(김계동 2001, 16). 한미동맹상 공약을 회피하여 미국이 단기적인 위협부담에서는 벗어나더라도 세계 전략 차원에서는 심각한 피해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나 중국과는 다른 이러한 부담이 미국의 약점이면서 동시에 힘이라고 할 것이다.

한국이 공산화되는 경우를 상상해보면 한미동맹 유지에 의한 미국의 이익은 사활적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권에 편입될 경우 이들의 태평양 진출은 더욱 용이해지고, 따라서 미국이 유사시 이들을 봉쇄하고자 할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부산항, 진해항, 제주도 강정항을 비롯한 한반도의 항구와 공항을 사용할 경우 서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주도권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일본 방어도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에게 한미동맹이 지니는 가장 큰 가치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봉쇄였다고 분석되는 이유이다(김현욱 2012, 257-258). 최근 미국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치가 급부상하였다면 한국의 가치도 그만큼 격상되었을 수 있다. 2014년 발표된 미국의 QDR을 보면 정세분석의 첫 번째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과 의도의 불투명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역의 정세를 안정시키는 '전통적 닻'(traditional anchor)으로 일본, 호주와 함께 한국을 거론하고 있다(DoD, 2014, 5).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한미동맹은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데도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핵무장을 하고 있는 적대적인 국가와 인접하여 최전방에서 방어해주는 한국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국에게는 매우 유리한 상황일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능력이 미국과 핵전쟁을 수행할 정도로 막강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몇 개 도

시에 피해를 끼칠 수는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능력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일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면서, 또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이면서 강화되는 위협”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DoD, 2014, 5).

6. 평가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약속한 대로 동맹공약에 따라 개입할 것이냐 여부는 누구도 사전에 단정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문제이다. 미국 스스로도 어떻게 될 지 예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에 이를 것인 바, 이러한 점에서 동맹공약의 이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공통위협, 감당능력, 국내 여론, 연루의 위협 정도, 동맹지속에 따른 이익’의 5가지 요소를 적용하여 한반도 유사시 미국 개입의 가능성을 판단해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함축하여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영향요소별 미국 안보공약 이행 정도 평가 결과

요소	이행요구 정도	내용	한국의 과제
공통위협	높음	- 북한 위협은 절대 공유 - 중국 위협은 공유 미흡	중국위협 공유 노력
감당능력	높음	- 감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강 - 지상 증원군 제한 가능성	미국이 증원제한되는 전력 위주 증강 노력
국내여론	낮음	- 타국 문제 불개입 여론 강화 - 외교노선에 반영 가능	방위비분담 증대 필요
연루의 위협 정도	낮음	-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위협 증대 - 중국과의 전면적 충돌 계기가 될 가능성	북한의 ICBM, SLBM 개발 저지 중요
동맹지속에 따른 이익	중간	- 동맹에 대한 미국의 신뢰성 과시 - 미국의 주관적 판단 가능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적극적 설명 필요

<표 3>을 보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한미 양국이 지니는 위협의 공통성이 커진 상태이기는 하나 중국 위협에 대하여 한국이 공유하는 정도가

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감당능력의 경우 국방예산과 지상군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 정도를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증원능력이 계획된 시기와 규모로 도래하지 못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동맹지속에 따른 이익의 경우에도 한반도의 가치가 미국이 쉽게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국내여론과 연루의 위험이다. 현재 해외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개입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미국도 핵전쟁의 위험을 각오하지 않은 채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ICBM이나 SLBM의 개발에 성공할 경우 미국은 본토가 핵무기 공격을 받는 위험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어느 정도로 개입할 것인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고도화될수록 불개입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하여 미국의 확장억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 유사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높여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표 3>의 맨 우측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중국의 위협을 미국과 공유함으로써 위협의 공통성을 늘리고자 노력하고, 적극적 개입정책에 대한 미국 국내여론의 부정적 경향을 무마시킬 수 있도록 방위비분담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이 느끼는 연루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북한이 ICBM이나 SLBM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게 동맹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이익임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자신의 힘만으로 국방이 가능하다면 최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가들이 동맹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동맹으로 국방을 유지하는 만큼의 재원을 경제 및 복지 분야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남북대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동맹은 당연히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다. 유사시 지켜주기로 한 동맹국의 공약이 반드시 이행될 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대외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에 관하여 미국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의 대규모 핵 보복 약속이 핵억제전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 북핵 위협 상황에서 미국이 흔들릴 경우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공통위협, 감당능력, 국내여론, 연루의 위험 정도, 동맹지속에 따른 이익'의 5가지를 중심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판단해보았다. 그 결과 공통위협, 감당능력, 동맹지속에 따른 이익의 측면에서는 결정적인 문제가 없으나 미국의 국내 여론과 연루에 위험에 대한 평가에서는 상당한 우려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이 ICBM이나 SLBM을 개발할 경우 미국이 한반도 사태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미국 본토에 대한 핵무기 공격을 각오해야하고, 그렇게 되면 동맹공약의 이행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 한국은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도 유사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병행하면서 대미 관계를 처리해 나가야 한다.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입장을 냉철하게 이해해야하고, 동시에 미국이 강한 개입의지를 갖도록 미국의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 ICBM와 SLBM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국은 최악의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공약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그에 부합되도록 군사력 증강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의 동맹공약 이행 의지가 약하더라도 제공될 수 있는 전력에 대한 투자는 최소화하면서 유사시 미국이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전력을 우선적으로 증강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은 지금까지 자주성 차원에서 해·공군력의 증대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실제에 있어서 이 부분의 전력은 동맹공약 이행 차원에서 미

국이 쉽게 지원할 수 있는 전력이다. 오히려 탄도미사일 방어나 지상군의 작전수행을 위한 전력을 증강함으로써 북한의 핵사용이나 핵위협 하에서의 제한공격 등에 대비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국가의 안보는 항상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것이고,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anarchy)라고 불리기도 할 정도로 개별 국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 한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약속처럼 동맹 공약이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까지도 사전에 고려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서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논문투고일: 2016년 06월 15일

심사완료일: 2016년 07월 15일

게재확정일: 2016년 07월 26일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한미동맹 60년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국방부. 2014. 『2014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 김계동. 2001. “한미동맹관계의 재조명: 동맹이론을 분석틀로.” 『국제정치논총』. 제41집 2호, 7-26.
- 김준형. 2009. “동맹이론을 통한 한미전략동맹의 함의 분석.” 『국제정치연구』. 제12집 2호, 101-125.
- 김현욱. 2012. “미국의 대한정책의 목표와 특징.” 김계동 외. 『한미관계론』. 서울: 명인출판사.
- 류병현. 2007. 『한미동맹과 작전통제권』. 서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박계호. 2013. “한반도 위기발생 시 미국의 개입 결정요인.” 『국방연구』. 제56권 1호, 53-80.
- 박원근. 2004. “국가의 자율성과 동맹관계.” 『국방정책연구』. 제64호, 79-99.
- _____. 2014. “한미동맹의 재해석: 동맹 이익과 비용.” 2014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획학술회의.
- 박종진. 2010. “탈냉전 이후 한·미 동맹 변화의 양상과 요인.” 『경희행정논총』. 제23권 1호, 1-32.
- 변창구. 2016. “미·중 패권경쟁과 남중국해 분쟁: 실태와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제79권 0호, 27-46.
- 서정경. 2008. “중국의 부상과 한미동맹의 변화: 동맹의 방기(Abandonment)-연루(Entrapment) 모델적 시각에서.” 『신아세아』. 제15권 1호, 95-118.
- 손한별. 2013. “미·중관계와 한미동맹 : 연루상황하 약소국의 전략적 선택.” 『신아세아』. 제20권 2호, 117-147.
- 유용원. 2013. “美, 北 보란듯이... B-2 스텔스기 훈련 공개.” 『조선일보』(3월 29일), A4.
- 유용원·전현석. 2016. “核미사일 탑재 B-52. 우리 공군 F-15K와 함께 첫 무력시위.” 『조선일보』(1월 11일), A4.

- 이문항. 2001. 『JSA-판문점』. 서울: 도서출판 소화.
- 이정철. 2009. “북미대립과 한미동맹: 변화와 딜레마.” 『한국정치연구』. 제18집 1호, 147-168.
- 장노순. 1996. “‘교환동맹모델’의 교환성: 비대칭 한미안보동맹.” 『국제정치논총』. 제36집 1호, 85-99.
- 채병건 외. 2016. “국방부 ‘북. SLBM 기술 진전 … 3~4년 내 실전배치.’” 『중앙일보』(4월 25일), 8.
- 최종우. 2010.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의 '동맹의 안보딜레마와 한·미 동맹.’” 『군사연구』. 제129집, 241-261.
- 허 완. 2014.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을 통해 본 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와 결속력 변화.” 『통일연구』. 제18권 1호, 37-71.
- 홍석률. 2003. “위기 속의 정전협정 - 푸에블로 사건과 '판문점 도끼살해' 사건.” 『역사비평』. 통권 63호, 57-76.

Albright, David. 2015. “Future Directions in the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Three Scenarios for 2020.” North Korea’s Nuclear Futures Series. U.S.-Korea Institute at SAI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16. “Homepage.” <https://www.cbo.gov/topics/budget>(검색일: 2016. 5. 6).

DoD(Department of Defense). 2014. *Quadrennial Defense Review*. Washington D.C.: DoD.

EAI 편집부. 2015. “강력한 동맹관계. 분열된 여론: 한미중일 공동인식조사.” EAI 스페셜 리포트(10월).

IISS. 2014. *The Military Balance 2014*. London: IISS.

Marshall, George C. and Claremont Institutes. 2015. “Missile Threat.” <http://missilethreat.com/missiles-of-the-world/>(검색일: 2015. 12. 21).

Morgenthau, Hans J. 1993.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Brief Edition. New York: McGraw-Hill.

Morrow, James D. 1991.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ies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904-933.

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Comptroller)/CFO. 2016. "Fiscal Year 2017 Budget Request." (February 9). http://comptroller.defense.gov/Portals/45/Documents/defbudget/fy2017/FY2017_Budget_Request.pdf(검색일: 2016. 5. 6).

Pew Research Center. 2013. "Majority Says U.S. Should 'Mind Its Own Business Internationally'." (Dec 3). <http://www.people-press.org/2013/12/03/public-sees-u-s-power-declining-as-support-for-global-engagement-slips/12-3-2013-2/>(검색일: 2016. 5. 7).

Pew Research Center. 2016. "Public Uncertain. Divided over America's Place in the World." (May 5). <http://www.people-press.org/2016/05/05/public-uncertain-divided-over-americas-place-in-the-world/>(검색일: 2016. 5. 7).

Shanker, Thom and Cooperfer, Helene. 2014. "Pentagon Plans to Shrink Army to Pre-World War II Level." *New York Times* (Feb 23).

Snyder, Glenn H. 1984.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No. 4(1984), 461-495.

Walt, Stephen M. 1997. "Why Alliances Endure or Collapse?" *Survival: Global Politics and Strategy*. Vol. 39. No.1, 156-179.

Woolf, Amy. 2015. *U.S. Strategic Nuclear Forces: Background, Developments, and Issues*. CRS Report RL33640 (November 3).

〈국문초록〉

한미동맹에 있어서 미국의 안보 공약 이행 정도에 대한 분석

박희락
국민대학교

본 논문은 미국이 어느 정도로 확고하게 동맹공약을 이행할 것인가를 판단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월트(Stephen M. Walt)의 이론을 바탕으로 공통위협, 미국의 감당능력, 국내여론, 연루의 위협, 동맹지속에 따른 이익이라는 5가지 요소를 식별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미국의 동맹공약 이행 정도는 공통위협, 감당능력, 동맹지속에 따른 이익의 측면에서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미국의 국내여론과 연루 위협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점이 있고, 특히 북한이 ICBM이나 SLBM을 개발하여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될 경우에는 그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위협의 공통성을 늘릴 수 있도록 중국의 위협을 미국과 공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미국의 경제적이거나 군사적 감당능력이 감소되면서 국내여론이 부정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방위비분담을 다소 증대시키거나 미군이 증원하지 못하는 군사력의 증강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미국이 느끼는 연루의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북한의 ICBM이나 SLBM 개발을 지체 및 자제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주제어: 한미동맹, 동맹공약, 한미관계, 연합방위, 연루, 북한 핵무기

〈Abstract〉

An Analysi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U.S.'s Commitment in
the South Korea-U.S. Alliance

Park, Hwee Rhak

Kookmin University

This paper is written to determine how strong the U.S.'s commitment promise in the South Korea-U.S. alliance. For the purpose, it uses five factors such as the commonality of threat, capabilities for implementation, domestic politics, risk of entrapment and benefit of alliance, inspired by the alliance theory of Stephen M. Walt. It analyzes several historic examples in the South Korea-U.S. alliance.

In conclusion, this paper evaluated that the commonality of threat, capabilities for implementation and benefit of alliance from the U.S. side did not have serious problems, while domestic politics and risk of entrapment could be problematic. Especially, if North Korea succeeds to develop ICBMs and SLBMs, the risk of entrapment for the U.S. would be too high to take.

South Korea should increase the commonality of threat with regard to China, be more active in cost sharing for the U.S. Forces in Korea in order to ease the negative U.S.'s domestic public opinion for the commitment. South Korea should mobilize all possible ways and means to stop the North Korea's development of ICBM and SLBM in a way to reduce the entrapment burden of the U.S. It should be more active to prove its strategic values to the U.S in order to make the U.S. people to think the benefit of the alliance with South Korea exceed the risk of it.

※**Keywords:** South Korea-U.S. Alliance, Alliance commitment,
South Korea-U.S. Relation, Entrapment, North
Korean Nuclear Weapon